

# 국내 1호 무가선 관광트램 구체화

### 전주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중앙투자심사 완료 2023년 공사 착공 2024년 완공 계획

전주한옥마을에 국내 최초의 무가선 관광트램을 투입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길이 8.4m의 트램차량 7대가 관광객 등을 태우고 35분 동안 전동성당, 경기전, 전주향교 등 한옥마을을 한 바퀴 도는 계획이 용역 결과물을 통해 제시됐다.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장에서 박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10일 전주시장에서 박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보고회는 국내 최고의 철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한옥마을 관광트램의 가이더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옥마을 관광트램은 전력선 설치 없이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세계 최초의 무가선 관광트램으로서 10km/h 내외의 낮은 주행속도로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관광지 내 이동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광트램 총사업비는 공영주차타워 건설비를 포함

해 총 639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트램차량 규격은 길이 8.4m, 폭 2.4m, 높이 3.37m로, 정원은 좌석 18명, 입석 18명 등 36명으로 잡았다. 투입되는 트램차량은 총 7대다. 트램노선의 경우 한옥마을공영주차장~어진박물관~전동성당~경기전~청연루~전주향교~오복대관광안내소~한옥마

을공영주차장을 순환하는 3.3km의 코스로 제시했다. 7대의 차량이 35분 동안 이 코스로 운영을 하게 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운행 노선과 관련, 추후 전라감영과 객사길, 영화의 거리, 시청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탑승 정원에 따라 연간 적게는 64만4,075명에서 많

게는 92만7,468명에 이르고, 운영비는 연평균 4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트램이 운영되면 약 9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전라북도 내 약 25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2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다만 관광트램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정치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완성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와 협의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는 한편,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런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에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가 될 한옥마을 관광트램은 한옥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와 시민,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도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내버스 요금 인상

### 7월 1일부터 일반 1300~1500원·청소년 1050~1200원 어린이 650~750원... 정기관 인상은 내년으로 연기

7월 1일부터 전주시내버스 일반 요금이 200원 인상된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일반 요금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1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만 19세 이상 일반 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15%) 인상됐고, 만 13~18세 청소년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만 6~12세 어린이들은 650원에서 750원으로 100원 올랐다.

또 종전까지 초등생, 중고생, 일반 등 신분제 방식으로 요금이 적용돼 왔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연령제로 변경해 요금을 받기로 했다. 이로써 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드는 동시에 조기 입학자 등도 나이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종전과 같이 각 요금에서 50원이 할인된다. 하차 후 40분 이내에 갈아탈 시에는 무료로 환승할 수 있다.

시는 전주시내버스공공관리위원회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변경내용을 기·종점, 승강장, 시내버스 차량 내부, BS,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내버스 정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내년으로 인상이 연기됐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서민부담 가중을 고려해 전북에서도 요금 인상 시기를 몇 차례 늦추어나 계속되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됐다"며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월 32회 이상)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주시-하나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 총 40억원 규모 대출 특례보증

전주시와 하나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과 양동원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10일 전주시 시청에서 '전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총 40억 원 규모의 대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전주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2억 원씩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업체당 기본보증액 포함 최대 4000만 원까지 담보 없이 보증을 하게 된다. 특히 시는 1%를 초과하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5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연 1% 수준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 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함께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한 거치상환 방식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595~879점 사이인 소상공인이다. 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이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 회복을 위한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고,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증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착한 임대운동, 전주착한캠페인,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 등의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성장·균형발전 협력

### 시, 한국국토정보공사·농촌진흥청·국민연금공단 등과 다양한 상생협력 펼쳐와

전주시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농촌진흥청이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과 발달장애인 재활 등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첫걸음으로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부터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주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전북혁신도시에 등지를 둔 이전 공공기관들과 전주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북에 등지를 둔 공공기관들은 지역에 정착한 이후 전주시

와 다양한 상생협력에 나서면서 전주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함께 우수사업과 정책을 배우는 스터디투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주발전을 이끌 국가예산확보와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역사업과 공간정보사업 등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KX)의 경우 전주시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소유자와 매수 희망자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거래하는 디지털플랫폼인 '공가량'을 운영하는 등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시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를 연금 중심의 대한민국 제3금융도시,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여기에 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전주푸드 활성화와 도시농업 확대 등 농업 활성화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콩나물국밥의 주원료인 콩나물콩의 품질 고급화 지원과 논 이모작을 위한 조생종밀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해왔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새로 개발한 종자·종묘와 신기술을 우선 보급하고, 공동 시범 및 연구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전주 미래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해마다 '전주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전주를 대한민국의 '책의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신선하고 안전한 전주푸드로 구입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도 동참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워내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혁신도시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성장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